

상장폐지 요건 강화…“2029년까지 부실기업 230곳 퇴출”

거래소, 불공정거래 적발·심리 6→3개월 단축 등 업무보고
코스피 상장사 시가총액 50억서 500억까지 단계적 상향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할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중시 퇴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체계도 개선해 적발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개월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국거래소 등 산하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고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인프라 내실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거래소 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실기업 퇴출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상장폐지 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현행 50억원 이상인 시가총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2028년엔 500억원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은 2029년까지 300억원으로 올라간다.

코스닥 시장 또한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거래소가 다른 변수는 제외하고 기준 상향만 적용할 경우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강화된 퇴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체 상장사 가운데 약 8% 수준이다.

거래소는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하면 국내 상장사 수는 여전히 많은 편”이라며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에 따라 다양한 부실기업 조기 퇴출 방안을 정책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따른 여러 반발이 있었지만 변화의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울러 거래소는 계좌별 조사 시스템을 개인별 조사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를 크게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상거래 적발부터 심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통상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거래소는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잇따른 전산·보안 사고에 대응해 금융 인프라 전반의 보안 체계도 점검했다.

특히 금융보안원은 사전 예방 중심의 보

안 관제 강화 방안을 보고하며, 공격 탐지 단계부터 SI를 활용한 감시 감지 체계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주주총회 활성화와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준비 상황을 보고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와 대안신용정보 활용 확대 계획을, 금융결제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대와 국가 QR결제 도입 추진 현황을, 보험개발원 실손 24 연계 확대 방안 등을 각각 설명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8.47p(0.84%) 오른 4,624.79로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코스피 4600선 첫 돌파…연일 ‘역대 최고’

일평균 거래대금 24조1050억…5년만에 20조 돌파

코스피가 12일 장중과 종가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 4600선을 넘었다.

이날 코스피는 직전거래일보다 53.57p(1.17%) 오른 4639.89로 출발해 38.47p(0.84%) 오른 4624.79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8일 장중 최고가인 4622.32와 지난 9일 종가 기준 최고점인 4586.32를 모두 넘어선 기록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4652.54까지 올랐다가 점차 오흘췌이 둔화에 한때 하락 전환하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세를 되찾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3512억원, 1013억원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2100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89p(0.20%) 상승한 949.81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증시는 대형 반도체주의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원전주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두산에너지빌리티(4.63%)를 필두로 비

에이치아이(3.70%), 한국전력(3.24%), 한전기술(5.24%), 한신기계(3.30%) 등 원전주는 동반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9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 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는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기대감에 4.41% 뛰었다.

반도체주는 오전장에서 동반 상승했으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화하며 오후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들어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4조105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월별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21년 1월(26조4778억원) 이후 5년 만이다. 최근 코스피가 미국발 기술주 훈풍과 호실적 기대감에 고공행진하면서 지난달(14조4170억원) 대비로는 9조6880억원(67%) 불었다. 이날 들어 12일까지 코스피는 9.7% 올랐다.

업체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110조 체납’ 전수조사…국세청, 체납관리단 500명 선발

3월 정식 출범…“청년·경력단절여성 등 균형 채용”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정식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채용분야는 방문실태확인원 375명(광주청 30명),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광주청 10명)이다.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한다.

임용한 국세청장은 133만명·110조 7000억원(2024년 기준)에 달하는 체납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체납관리단 신설을 추진하고 지난해 9월 시범운영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

해서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독촉·압류·수색 등 행정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의 거주지·사업장을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지를 살핀다. 보유 재산 규모와 거주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월세 거주일 경우 보증금과 월세액은 얼마인지 등도 따진다.

생계가 어렵다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계획서를 받는다.

실태확인 결과와 분납계획서는 체납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 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해 본청에 11명, 지방청에 44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시범운영을 거

쳐 운영 매뉴얼과 전산시스템도 개발했다.

현장 안전사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한 조로 편성된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 등을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하는 보조 업무를 한다.

월~금 주5일제로, 하루 6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에 급여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이다. 식대·연차수당은 별도 지급돼 월 180만원 수준을 지급한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이나 각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29일 서류합격자를 발표한 뒤 내달 6일까지 면접 심사를 거쳐 내달 23일 최종합격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내달 26일부터 3월 3일까지 교육을 거쳐 4일 출범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한다. 여름 한 달간 무급 휴무 기간이 있으며,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안 된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실태확인원이 반드시 필요한 고액·장기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성과를 분석해 실태확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법집행을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도, 산단 등 중소기업 근로자 식비 지원

천원의 아침밥·든든한 점심밥 사업 본격 추진

사업 신청은 오는 14일까지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정원의 서류 검토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은 2월부터 아침밥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취약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

심 외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상반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5월부터 외식비의 20%를 지원하며, 월 지원 한도는 4만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21일까지 관할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은 ‘직장인 든

든한 점심밥’ 사업을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고물가 식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아침과 점심 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과 쌀 소비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17만8000식의 아침 식사를 지원한 바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도가 저탄소·인공지능 기반 농업 신기술 보급에 본격 나선다.사진은 로봇 활용 작물 수확 모습.